통일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27.(금)	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지승우 (02-2100-5730)
		담당자	서기관	이승호 (02-2100-5731)
			사무관	최진용 (02-2100-5733) 홍승미 (02-2100-5734)

"책임지는 보훈, 안전한 나라, 함께 여는 통일"

- 2023 통일부 업무보고 -

2023년 핵심 추진과제

올바른 남북관계 구현	통일미래 준비
1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2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3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	4 통일미래 청사진, 추진전략 재정립 5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6 올바른 통일관·대북관 정립 7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

□ **통일부는 1.27(금)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·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「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」를 실시하였습니다.**

o 이번 업무보고는 「책임지는 보훈, 안전한 나라, 함께 여는 통일」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·총리실·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·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(통일분야 10명*)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

* 유은지 기타리스트, 얀 니클라스 독일인, 정승균 대학생, 김범수 세이브NK 대표, 강윤주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법무관, 진성민 교사, 양준혁 前 야구선수,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, 이시준 대학생기자단 등

o 통일부·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·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△통일미래("그래도 통일") △지방시대 구현 △국민이 안전한 나라 △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.

- 통일부 토론은 "그래도 통일"이라는 주제로,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,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.

□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‘올바른 남북관계 구현’과 ‘통일미래 준비’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,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o 특히, “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,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‘비핵, 평화, 번영의 한반도’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”를 밝혔습니다.

□ 2023년 통일분야 핵심 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Ⅰ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

1. 「담대한 구상」 이행 본격화

□ 「억제+단념+대화」(3D)의 총체적 접근 강화

o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.

o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, 도발에는 압도적·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하여 핵개발을 단념시키겠습니다.

o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여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□ 「담대한 구상」의 추동력 제고

o 「담대한 구상」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,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·군사·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여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
o 외교부,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「담대한 구상」에 대한 국내외 공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2.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

□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

o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·간접 접촉을 모색하겠습니다.

o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.

o 남북대화가 재개되면, 이산가족·국군포로·억류자·납북자 등의 생사확인, 상봉,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겠습니다.

□ 남북간 대화·협력체계 정립

o 향후 분야별로 고위급·실무급 협의·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o 「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」를 구성하고,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「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」하는 구조도 정착시키겠습니다.

o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신변안전·투자보장 등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.

3.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

□ 「북한인권법」 이행 정상화

o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민·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*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△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인권증진 활동 협력 및 지원(연간 20억원 규모) △'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'(가칭) 구성, 정책 방향 자문

o (가칭) 「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」(국문·영문)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.

o 주요국 정부, 국제기구, 시민단체 간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.

* △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 △UN 북한인권결의 20주년 계기 담론 확산

□ 인도적 협력의 일관된 추진

o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차원에서 '인도적 지원은 정치·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'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.

o 보건의료,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, 식량·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.

Ⅱ 통일미래 준비

4. 통일미래 청사진, 추진전략 재정립

□ 「新통일미래구상」(가칭) 마련

o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「新통일미래구상」(가칭)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자유, 인권, 소통,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.

- 상반기 중 「통일미래기획위원회」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,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「新통일미래구상」(가칭) 】

o **(성격)** 선도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·국제협력 구상

※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「담대한 구상」이나, 장기적 통일방안인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과 상이

o **(기본방향)** 한반도 평화 및 민족 번영 실현과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

- 국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폭넓게 거쳐,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기반 마련

o **(추진계획)** 상반기 중 구상내용 구체화, 연내 적절한 시기 발표 목표로 추진

- 국제통일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해외 전문가·국제사회 의견도 수렴

□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 업그레이드

o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을 수정·보완하고 이를 '24년(발표 30주년)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
□ 민·관 협업 플랫폼 구축

o 각계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·관 협업 플랫폼인 「통일미래기획위원회」를 신설하고,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통일미래기획위원회 】

o **(기능)**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로서, △통일미래 담론 개발 △정책 제안 △국내외 공론화 사업 등 추진

o **(운영)**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

- 위원회의 정책개발을 보좌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4개의 분야별 전략그룹 (정치·군사, 경제, 인도·인권, 국제협력) 설치

5.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

□ 조직·업무 재설계

o 탈북민이 원하는 재교육·재정착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.

- 탈북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은 거점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재교육과 재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.

o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,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, 일자리,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(안) 】

o 수료생 재교육·재정착(가칭, '재출발 지원 프로그램')* 운영

* △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△인턴 지원(노동부 '국민취업지원제도', 남북하나재단 '취업성공 패키지' 활용) △재출발 장려금 신설 추진

o '질 좋은 취업'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

- △'1인 1기술 자격' △실습·현장 중심 △취업 연계성 강화

□ 체계적인 위기관리

o 탈북민 위기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(1,200여명)를 상시 직접 관리하고,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트라우마 치료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】

o 하나원(정신과 전문인력)에 「마음건강 지원센터」를 설치, 증상별로 관계기관과 연계

- 경증은 △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△하나센터(25개) △하나재단 심리상담센터 등 지역 시설에서 안정적 상담 진행
- 중증은 전문 의료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 진료 실시, 하나재단 의료비 지원(700만원 한도) 확대 추진

o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버팀목이 되는 탈북민·지역 공동체 지원

- △봉사모임 등 지역 기반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△밀집거주(임대아파트) 지역에 '소통 공간' 운영 지원

6. 올바른 통일관 · 대북관 정립

□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

o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헌법에 규정된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'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, 탈북민 강사 등을 통한 북한 실상 강연·교육을 국내외에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.

o 학교·지역거점과 연계하여 '지역통일교육 생태계'를 구축하고,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「지역통일교육 생태계 구축」 추진 방안 】

o **(지역협의체 단계적 구성)** 통일교육기관·유관기관(단체) 간 사업계획 공유 및 공동·협력사업 발굴, 통일행사(세미나·경연·축제 등) 상호 참여 등 교류 활성화

- 동일 지역 소재 기관 간 MOU 체결, 정례 협의체 구성·운영

o **(사회단체 연대)** 지역 통일교육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체계에 편입

- 지역 거점 민간단체 및 통일교육원과 MOU를 체결한 사회·종교단체(자유총연맹, 조계종 등 8개)를 시작으로 협업방안 모색

□ 통일문화 공감행사 개최

o 5월 통일교육주간과 각종 통일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유도하고, 청년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.

o 재외동포 사회 등과 협업하여 해외지역 통일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.

□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

o 북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북한자료의 접근성·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고, 「통일정보자료센터」를 착공하여('23.9월 고양), 북한·통일 도서관·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.

o 북한 신문·방송 등의 개방 분야·수준·방식을 구체화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.

7.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

□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 설치

o 국민들께서 기탁해 주신 민간 기부금이 적립·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예를 들어,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을 위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·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어렵기 때문에, 「남북협력기금법」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자 의도대로 기금이 적립·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
【 참고: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】

o **(현재)** 민간기부금이 정부 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, 적립 근거가 없어 당해 연도 미사용액이 차년도 기금 수입으로 귀속,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

o **(개정 방향)**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, 기부금을 기탁·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 ⇨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·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

□ 제1호 권역별 「통일⁺센터」 개관

o 제1호 권역별 「통일⁺센터」를 개관('23.9, 목포)하고, 「통일⁺센터」를 중심으로 지역통일관,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·통합하여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* `26년까지 매년 전국 총 6개 권역에 「통일⁺센터」를 설치해 나갈 계획

【 참고: 「통일+센터」 추진 방향 】

□ 권역별 「통일+센터」 구축, 지역 통일 인프라 연계·통합 추진

o '23년 호남 개관을 시작으로 '26년까지 강원·경기·충청·영남·제주 설치 추진

* ('18) 인천(시범) → ('23) 호남 → ('24~'25) 강원·경기·충청 → ('26) 영남·제주

o 지역 통일 인프라 연계·통합과 관련하여 탈북민 사회 및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여러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

* ▸ 통일관(13개소) : 통일교육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
▸ 하나센터(25개소) :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

□ 통일·통합 관련 국제협력

o 독일·EU·베트남 등 통일·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, 정전 70주년 계기 「한반도 국제포럼」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.

【 참고: 통일·통합 사례 연구 】

o 독일·베트남 등 아세안·EU 정책사례 집중 연구, 통일·대북정책 수립에 활용

- '한독통일자문위원회' 사업과 더불어, 베트남의 통일 이후 개혁·개방 과정의 역사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 추진

o 대표 사업으로 통일부–베트남 협력 사업 착수

- 「베트남 통합 및 개혁·개방 사례 아카이브」 구축 및 「한·베 개혁·개방 관련 자문위원회」 구성·운영을 목표로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
- 국제투자·금융 지원·교육·여성·관련 베트남 정책사료 파악·수집·연구 추진

o 여타 국가별·분야별 통일·통합 사례 연구도 권위있게 선도·집대성

- 기존 연구 종합·체계화, 관련 자료 공개·확산
- 연구 미진·필요분야 지속 발굴·확충, 중장기 계획 下 체계적 연구 실시
- 국내외 관계(연구)기관과 협업체계 구축, 효율적 역할 분담 추진
- 통일·통합 사례 연구 성과를 적극 참고·활용하는 통일·대북정책 수립 체계 정착, 정책의 구체성 및 수용성 제고 도모

□ **「비핵·평화·번영의 한반도」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. 2023년 통일부는 '국민과 함께, 흔들림 없이' 미래로,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.**

※ 붙임. 2023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